데스크 시각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홍 행 기
정치부장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국회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에 이어 의석수 20석 이상인 네 번째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주·의회 정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이 5% 수준의 지지율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가장 큰 '수혜자'는 평화당 소속 의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정의당이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내건 조건인 '공동교섭단체 20석 유지'와 관련이 있다.

지방선거 출마 사실상 봉쇄

애초 정의당은 협상 과정에서 평화당 측에 '소속 의원들의 지방선거 불출마 확답'을 강력히 요구했다.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으로 간신히 교섭단체 구성의 자격 요건을 맞춰 놓은 상황에서 의원 한 명이라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이탈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이유 있는' 요구는 최종 합의문에서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으로 수용됐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론 평화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봉쇄된 셈이다.

문제는 이 합의문의 문구가, 지방선거 불출마 명분을 찾고 있던 평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훌륭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의회에서 더욱 충실하고 강력하게 반영하겠다는 게 공동교섭단체 구성의 목적이지만, '질 것이 뻔한' 선거에 출마해 의원 배지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지역민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체제를 정립해 준 것은 "양당이 경쟁하고 노력해서 지역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해 달라"라는 것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평화당에서는 "국회에서 힘이 세진 만큼 지역 예산을 더 많이 따오고, 지역 관련 정책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다"고 항변하겠지만, 상황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호남 출신 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많은 호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또 예산이나 정책 분야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을 충분히 살피고 배려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헌안에는 전문에 '5·18정신'이 들어가 있을 정도다. 이는 다시 말해, 지금은 평화당이 '호남의 이익을 위해'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싸워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민들은 "평화당 소속 광주·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핑계 삼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려 한다"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조차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명실상부한 호남 정당으로 부활하기 위해선 '의원 배지를 내던지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좌고우면하면 민심은 외면

'현재로선 민주당을 이겨 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초선은 물론 중견 의원들까지도 시장·지사 선거 출마를 기피한다면, 평화당의 저조한 지지율 만회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을 모태로 삼고 있는 정당이 당장 지지율이 낮고 당선이 어렵다고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에도 나서지 않는다면 '불임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테고, 결과적으로 오는 2020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이 분명하다.

광주·전남은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민주화 정신의 발상지다. 시대정신을 외면하고 개인과 정당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평화당도 고심을 했겠지만, 난국을 헤쳐 가기 위해선 좌고우면보다는 희생과 결단의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펜칼럼

공평한 사회로의 관문 미투(Me-Too!)

임 명 재
약사

사회 각층에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저명한 영화 제작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한 여성이 자신의 끔찍했던 과거를 폭로하고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자신도 당했다는 뜻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나도 그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여성 검사의 폭로로 시작되어 각계각층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폭로되고 이것이 불평등의 해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미투' 운동은 단순히 여성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으로 국한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오기까지 수많은 '미투' 들의 용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노동 운동이다. 저임금에 인간 이하의 노동 환경에서도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착취당했던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었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을 하면서 노동계의 '미투' 운동에 스스로 도화선이 되었다. 하루 15시간을 근무하고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못하는 환경에서 사회적 약자인 그 들은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았다. 그 후부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추구한 끝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왔다.

두 번째는 인권에 대한 '미투' 였다. 인권의 신장과 민주화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5·18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것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촉발된 여성들의 '미투' 운동이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는 공정함과 공평함에 매우 인색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걸 통해 사회 전반적인 안정을 추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그릇된 통치를 해왔다. 정치가들의 수준이 그랬으니 사회 전반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미약했다.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에게 외치는 것 뿐이었으리라.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목숨까지 빼앗기면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지 못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외침은 그저 그들의 욕구 불만일 뿐이었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 내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내가 '미투'를 외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미투'를 외치고 싶었을 것이고, 취업 준비생들은 각종 권력과 뒷배경으로 합격증을 받아내는 세력들로부터 '미투'를 고민했을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원하는 훈련병들은 각종 말도 안되는 이유를 꾸며내서 불법적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호의호식하며 사회적 지도층이 되어가는 권력형 병역 기피자들로부터 '미투'의 당사자가 되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인생 동안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남성 우월주의, 사회적으로 남성이 중심이 되고 여성은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삶의 곳곳에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과거에는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애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사회 각 분야에서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다. 가장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여군의 역할이 전투 병과에까지 진출하였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를 무대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여성이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그동안 여성들이 도맡아 왔던 일들도 이젠 나누어야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남녀를 지나치게 구분하고 마치 남녀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주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거 없이 차별화된 남과 여의 차이도 공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누구라도 우리의 어머니이고 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할 대상이고 사랑하고 보호해야할 사람이다. 우리는 여성에게서 태어나고 사랑을 받고 길러진다. 결코 나와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니다. 검사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업인데도 여성 검사가 '미투'를 외쳤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사회 저변에 만연돼 있다는 얘기일까?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의 아내를 위해, 딸을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 고

광주 문화 정책과 문화전당

박 향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아시아문화원은 지난달 27일 올해 첫 정례회의를 열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를 통해 신임 전당장은 광주시는 물론 지역 예술인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우리 시의 의지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우리 시와 전당은 그동안 소통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 결과 간헐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뭔지 모를 아쉬움이 늘 있어 왔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전당장은 이런 마음을 읽었는지 첫 만남에서 "우리 2주에 한 번 봅시다"라는 제안을 먼저 해 왔다. 우리 또한 "그럽시다"라는 대답을 하는데 단 일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으로서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광주에 조성한다는 거대한 국책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거점시설인 전당을 설립해 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그 에너지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5대 문화권 조성 사업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기반 마련과 문화산업 5대 콘텐츠 집중 육성이 그 다음이다. 마지막은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문화 교류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1단 2국 7팀 46명의 인원으로 출범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에서 추진했다. 아문단은 첫 번째 중점 과제인 전당 건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전당 완공이 가시화된 2009년부터는 아문단의 업무를 전당 운영과 문화도시 정책분야로 구분했다. 아문단 조직을 모태로 임기제 가급의 전당장과 4개과 50명의 조직 규모로 2015년에 전당이 출범하면서,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지원하고 조성 사업을 총괄해야 할 아문단 조직은 1단 8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많은 사람들이 조성 사업 전체가 전당을 통해 이뤄진다고 착각하는 것은 이런 전당 조직의 탄생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당 개관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일제히 전당에 쏠리게 되면서 아문단은 점점 뇌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역의 문화기반 조성과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을 위해 발굴·건의한 아시아 근대미술관 건립, 첨단 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CT연구원 건립,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등이 포함된 조성 사업의 나머지 주요 역점 과제는 아문단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외지에서 온 문화전당의 구성원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 공간의 의미와 쓰임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들이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또한 전당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전당 조직의 일원화, 지역 문화 생태계와 전당과의 관계, 옛 도청 복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도 늘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전당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터전을 벗어난 이곳 전당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만으로도 버거움을 느끼고 있고, 사업 수행 초창기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또 다른 짐이었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당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은 지금도 "전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전당은 지역 예술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실망과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어쩌면 전당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역 문화 생태계를 고려한 전당의 역할에 대해 함께 그리고 더 깊게 고민해 보자는 간청임과 동시에 과연 우리 시의 문화 정책은 지역 예술인들과 어떻게 소통해왔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목소리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의 문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디쯤 와 있는지를 되짚어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시작한 이 작업은 조만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예술 관련 대학 및 단체는 물론 전당, 아문단과도 함께 할 것이다.

2주에 한 번씩 보자고 약속한 날, 전당은 당신에게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면서 그에게 전당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사람은 곧 소통이다. 그 소통이 시작되었다. 온 천지가 꽃 세상이다. 우리는 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저 꽃망울들을 위해서 중력을 거슬러 힘겹게 영양분을 끌어올려야 했던 겨울 동안의 노고가 있었음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주체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예정된 시간의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社 說

공명 선거 해치는 가짜 뉴스 지속적 단속을

지방 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짜 뉴스(fake news)를 퍼뜨리는 '거짓말 선거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사실 유포나 흑색 선전, 여론 조사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6·13 지방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 사범 497명 중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은 138명에 이른다.

이는 2014년 지방 선거 때 같은 시점에 입건된 418명의 선거 사범 중 거짓말 선거사범이 60명이었던 것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광주지검에 적발된 지방선거 사범 14명 중 4명도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 전화 449대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나 일반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을 받아 선거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전남 지역 모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A씨 등 35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동일한 여론 조사 기관이 2월 초 실시한 A씨의 지지도는 12.2%로 전체 3위였으나 한 달 후 조사에서는 250차례에 걸친 중복 응답으로 27.5%를 기록해 1위로 뛰어올랐다는 것이다.

최근엔 금품 선거나 공무원 선거 개입과 같은 전통적 선거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이처럼 허위 사실 유포나 여론 조사 왜곡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늘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광주지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이 검사와 수사관 124명으로 '가짜 뉴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짜 뉴스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파트 난립 우려 민간공원 개발 왜 서두르나

광주시가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다. 광주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 중 15곳은 재정을 투입해 땅을 매입하기로 했으나 규모가 큰 도시공원 10곳은 민간 사업자가 특례 사업을 맡기로 하면서부터다.

도시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앞서 올 1월 도시 민간공원 4곳에 대한 특례 사업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2단계 대상은 풍암동 중앙공원, 운암동 중외공원, 일곡동 일곡공원, 동림동 운암산공원, 신안동 신용공원, 소촌동 송정공원 등 6곳으로 전체 면적은 742만 6000㎡에 달한다. 이들 6개 공원은 대부분 도심 속에 자리 잡아 광주의 허파로 불리며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보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달 말 안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공고를 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시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2020년 7월1일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춘 행정 절차만 염두에 두면서, 공원 보전과 시민 이용편의 증진이라는 핵심 사안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국고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공공자금의 투입,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적 개발 등의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광주시도 이를 모를 리 없지만, 2단계 민간 특례사업 기간이 2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원 일몰제 시행 이전에 특례 사업이 성과를 내야 오히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정책이나 지침 변경 등을 보아가며 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되 경관과 환경 보전에 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無 等 鼓

공천(公薦)

지방선거라는 장(場)이 섰다. 각 정당들은 소비자인 유권자들에게 좋은 상품(후보와 정책)을 내놓고 가슴을 졸이며 선택을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많고 많은 상품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에서 인기를 끌 수 있다. 최소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만한 좋은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상인이 잘 팔릴 만한 상품을 가게에 내놓는 것처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을 공천(公薦)이라고 한다. 공천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를 경선 과정 없이 입당 절차만으로 공천하는 전략공천이나 두 사람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경선(競選) 등이 그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정당이 훌륭한 후보를 공천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은 엄격한 잣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역 문화와 지역민들의 정서에 맞는 인물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겉으로는 디자인이 화려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품질이 좋지 않은 상품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한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기준이 '들쭉날쭉'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여론의 중심인 시·도당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중앙당의 오만과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적격 사유가 있는 후보들이라도 어떤 후보는 중앙당에서 후보 자격 심의에 통과되고, 다른 후보는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천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혀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 정당들이 유권자로 구성된 시장을 개발하고 넓혀야만 새롭고 좋은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며 재고(在庫) 상품이나 불량 상품을 강매한다면, 이후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에게 또다시 '회초리'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6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회2부 220-0652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